

與 혁신위, 불출마·험지출마 거부반응에 “내달까지 기다릴 것”

김경진 “조기해체, 최초 형성 때 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어” 해명 인적쇄신 명단작성 검토 논란 부인 김기현 “일부 급발진으로 당 흔들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에 권고한 불출마·험지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내 반응이 없으면서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해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인 위원장도 14일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고 100% 확신한다”면서 지목한 당사자들의 응답을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당사자들이 거부반응을 보이자 혁신위 조기 해체, 인적 쇄신(불출마) 명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위파봉 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단 작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이날 4·3 제주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12월 초까지 할 일이 많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조기 해산의 전

제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혁신위가 최초 형성될 때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혁신위 권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

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저보고 서울에 가란다. 제 일랑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혁신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대구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혁신위 ‘조기 해체설’은 당내에서 반응이 없고, 혁신위가 당내에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 해체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김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

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선 혁신위가 인적 쇄신 명단작성을 검토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정치권에는 지도부, 대구·경북(TK) 중진, 부산·경남(PK) 중진, 충청권 중진 등이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혁신위는 이를 부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혁신위)가 선거 대책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것(리스트작성)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野, 총선용 정책 ‘비판’

윤재옥 “野 법인세 강화, 단세포적 발상”

‘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으는 것 법인세 조세 경쟁력 이미 최하위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못 깨어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

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 를 아예 잡아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

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홍익표 “주식 양도세·상속세, 선거용 정책”

최악의 세수상황 더 악화될 것
연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논의 없는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면서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

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입 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꼬집었다.

홍원내대표는 “민생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는 어떠한 대응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됐다”며 “더 심한 것은 법인세 조정 효과가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기현, 박정희 생가 방문… “역사 바꾼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
“與, 박 대통령 정신 발전적으로 계승”
대구·경북 보수층 결집에 힘 쏟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라며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산업 단지로 지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울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송모제례’ 행사에서 영정에 현화하고 있다. /뉴스1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 공업 단지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나.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시절에 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역사적 결단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조석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당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이념과 공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미래 비전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었던 박 대통령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의 맥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

구·경북(TK)과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TK 지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할 수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 총선 전 ‘집토끼’ 민심을 먼저 다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박 전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을 승계해 당당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 전 대통령 서거 44주년에 참석했다. 지난 7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